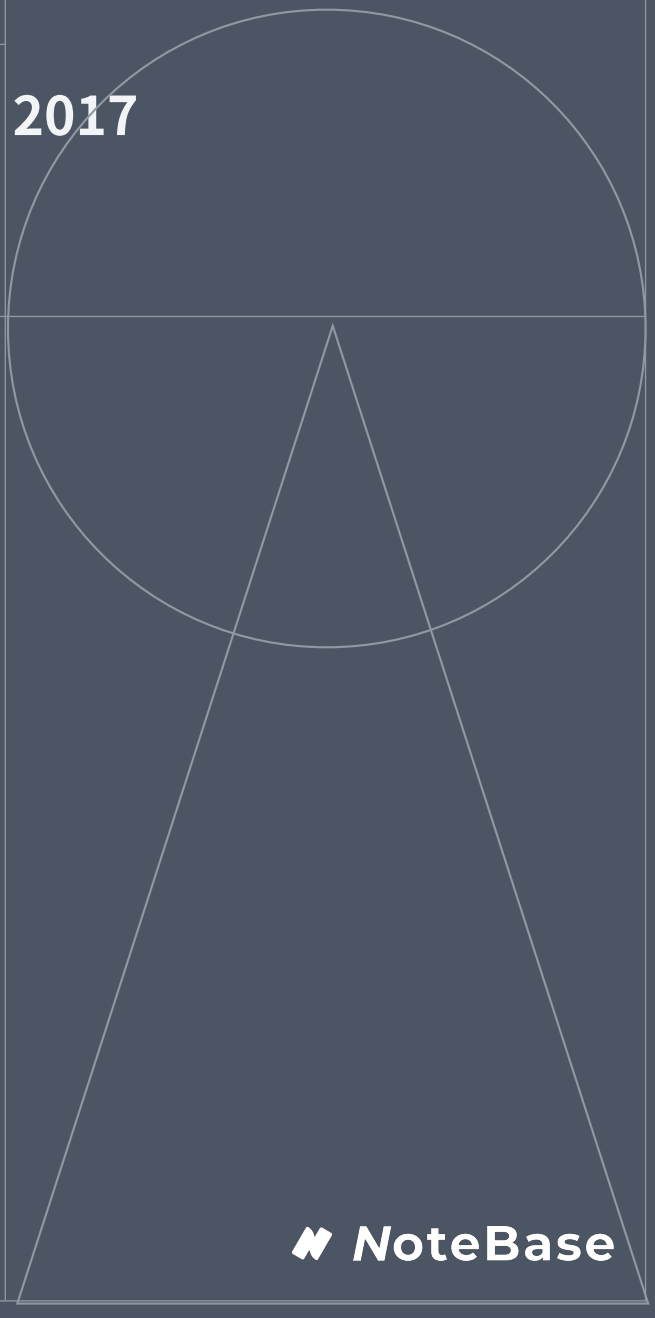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17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17

1. 다음 표에 제시된 사회화 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
공식적 기관		(나)
비공식적 기관	(가)	(다)

① (가)는 초기사회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② (가)는 (나)와 (다)보다 개인의 인성형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나)에는 학교가 해당된다.
④ (다)에 비해 (가)는 오늘날 사회화 기관으로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⑤ (나)는 사회화 과정에서 체계성 정도가 강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사회화 기관을 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공식적·비공식적 기관으로, 기초적 인성과 생활 양식의 형성에 중심을 두는지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의 습득에 중심을 두는지에 따라 1차적·2차적 기관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17

핵심 개념

(가)는 비공식적·1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가족이 대표적이다.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 속에서 언어, 생활 습관, 기본 규범 등을 처음 익히게 한다.
(나)는 공식적·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학교가 대표적이다. 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삼아 지식과 규범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다)는 비공식적·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직장과 대중 매체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화가 주된 설립 목적은 아니지만 개인에게 전문적 지식·기능이나 사회적 행동 양식을 습득하게 한다.
공식적 기관은 사회화 자체가 주된 목적이고, 비공식적 기관은 다른 목적이나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1차적 기관은 기초적 인성과 생활 양식의 형성에, 2차적 기관은 전문 지식·기능과 새로운 역할의 습득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준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의 대표 사례인 가족은 출생 후 언어, 생활 습관, 기본 가치 등을 처음 익히게 하므로 초기 사회화를 담당한다.
② O — (가)인 가족은 유아기부터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본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므로 (나)인 학교나 (다)인 직장·대중 매체보다 개인의 인성 형성에 일반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O — (나)는 공식적·2차적 사회화 기관이며, 학교가 이에 해당한다. 학교는 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지식과 규범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전달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다)에 비해 (가)는 오늘날 사회화 기관으로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이다. 오늘날에는 가족의 일부 사회화 기능이 학교와 대중 매체 등으로 이전되어 (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다)와 같은 비공식적·2차적 사회화 기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⑤ O — (나)인 학교는 정해진 교육과정과 전문 인력을 통해 계획적으로 사회화를 수행하므로 사회화 과정의 체계성 정도가 강하다.

오답 포인트

④는 현대 사회에서 여러 2차적 사회화 기관의 영향력이 커진 현상을 가족의 역할 확대라고 바꾸어 놓았다. 학교·직장·대중 매체 등의 영향력 확대는 가족이 담당하던 사회화 기능의 상대적 축소와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사회화가 주된 목적인가'로 공식적·비공식적 기관을 나누고, 다음으로 '기초적 인성과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가, 전문 지식·기능과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게 하는가'로 1차적·2차적 기관을 나눈다. 가족은 비공식적·1차적, 학교는 공식적·2차적, 직장과 대중 매체는 비공식적·2차적 기관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가족은 비공식·1차, 학교는 공식·2차, 직장과 대중 매체는 비공식·2차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사회화 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다양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영향력이 확대된다.

NoteBase

2. 다음의 사회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어렸을 때부터 계급적 배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득된 아비투스(habitus) 문화자본이 있다. 둘째, 객관화된 형태로서 책이나 예술작품 같은 문화자본이 있다. 셋째, 제도화된 상태로서의 문화자본인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있다.

① 부르디외(P. Bourdieu)가 주장한 이론으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② 발레, 클래식 음악 등과 같은 특정 예술 장르에 대한 감상 능력 또한 아비투스에 해당한다.
③ 학교를 통해 학생들은 자본가 계급이 요구하는 수동적 존재로 길러진다고 주장하였다.
④ 문화영역과 계급구조의 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
⑤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사회 내의 복잡한 역동적 관계의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및 문화재생산 이론을 문화의 역할, 계급구조, 학교교육과 연결하여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부르디외는 문화자본을 체화된 상태, 객관화된 상태, 제도화된 상태로 구분한다. 체화된 문화자본은 오랜 사회화를 통해 몸과 성향에 스며든 언어 습관, 취향, 감상 능력 등이며 아비투스와 밀접하다. 객관화된 문화자본은 책이나 예술작품 같은 문화적 대상이고,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졸업장이나 자격증처럼 사회적으로 공인된 형태이다. 학교는 지배계급의 문화를 정당한 문화로 인정하고 평가함으로써 계급 간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문화자본과 문화재생산은 부르디외의 대표 이론이며, 그는 문화가 계급 불평등의 형성과 재생산에 미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② O — 발레나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능력과 취향은 사회화 과정에서 몸에 밴 체화된 문화자본으로서 아비투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 X — '학생들이 자본가 계급이 요구하는 수동적 존재로 길러진다'는 표현은 부르디외의 핵심 주장을 정확히 나타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학교가 지배계급의 문화자본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평가하여 기존의 계급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설명해야 한다.
④ O — 부르디외는 문화자본의 분포와 학교의 평가 방식이 계급구조의 재생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
⑤ O — 부르디외의 이론은 문화의 자율적 역할과 상징적 권력을 강조하지만, 사회 내부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③은 학교가 불평등 재생산에 관여한다는 점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이를 '자본가 계급이 요구하는 수동적 존재의 양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부르디외의 핵심은 학생의 수동성 자체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문화자본이 학교에서 정당한 능력으로 인정되어 계급구조가 재생산된다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르디외 관련 선지는 '아비투스·체화', '책과 예술작품·객관화', '졸업장과 자격증·제도화', '학교교육·계급 불평등 재생산'의 연결로 판단한다. 학교의 기능을 학생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으로만 설명하면 부르디외의 문화재생산 논지와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부르디외는 문화자본의 세 형태와 학교를 통한 계급 불평등의 재생산을 설명한다.

NoteBase

3. 다음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본 연구는 변호사 5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변호 현장 경험과 개인 생활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의를 받아 녹음기를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참여자당 4회, 평균 8시간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보 기>

ㄱ. 분석 틀이 명확하고 통계 처리에 적합하다.
ㄴ. 양적 자료보다 질적 자료 수집에 적합하다.
ㄷ. 상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ㄹ.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연구 참여자와 장시간 대화하여 경험과 변화 과정을 깊이 파악하는 면접법의 성격을 양적 자료 수집 방법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면접법은 연구자가 참여자와 대화하며 응답자의 경험·의미·맥락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이 연구는 변호사 5명과 참여자당 4회, 평균 8시간 대화하고 그 내용을 녹음했으므로 수치 중심의 양적 자료보다 말과 경험 중심의 질적 자료를 수집한다. 면접 과정에서는 응답에 따라 질문의 순서나 내용을 조정하는 등 연구자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반면 통계 처리에 적합한 표준화된 자료 수집은 질문지법의 대표적 성격이고, 상황의 인위적 통제는 실험법의 대표적 성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은 옳지만 ㄱ은 옳지 않다. 장시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는 표준화된 수치 자료가 아니므로 명확한 분석 틀에 따라 통계 처리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틀린 ㄱ을 ㄹ로 고치면 '질적 자료 수집에 적합하고 연구자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가 된다.
② X — ㄱ과 ㄷ이 모두 옳지 않다. 이 연구는 통계 처리용 표준화 자료를 모으지 않았고, 참여자의 자연스러운 경험을 대화로 탐색했으므로 상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지도 않았다. ㄱ, ㄷ 대신 ㄴ, ㄹ이 옳다.
③ X — ㄴ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다. 대화 자료는 질적 자료에 해당하지만, 상황의 인위적 통제는 실험법의 특징이다. ㄷ을 ㄹ로 고치면 옳은 조합인 ㄴ, ㄹ이 된다.
④ O — ㄴ과 ㄹ이 모두 옳다. 참여자의 경험과 개인 생활의 변화 과정을 심층 대화로 수집하므로 질적 자료 수집에 적합하며, 대화의 흐름과 응답에 맞추어 연구자가 질문을 조정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⑤ X — ㄹ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대화했을 뿐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 ㄷ을 ㄴ으로 고치면 옳은 조합인 ㄴ, ㄹ이 된다.

오답 포인트

ㄱ의 '통계 처리'와 ㄷ의 '인위적 통제'가 함정이다. 녹음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자료를 객관적인 수치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며, 여러 차례 장시간 대화했다는 사실도 실험 상황을 통제했다는 뜻이 아니다. 녹음된 대화는 질적 자료이고, 인위적 통제는 실험법에서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구자가 소수의 참여자와 깊이 대화하여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면 면접법과 질적 연구로 판단한다.
표준화·대규모·통계 처리가 강조되면 질문지법, 변수 조작·통제 집단·인위적 상황이 강조되면 실험법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심층 대화는 질적 자료와 유연성, 표준화된 통계는 질문지법, 인위적 통제는 실험법이다.

NoteBase

4. 다음 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세 가지 문화 접변의 유형 (가)~(다)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구 분	(가)	(나)	(다)
각각의 문화가 유지되었는가?	아니오	예	예
제3의 문화 요소가 나타났는가?	아니오	아니오	예

	(가)	(나)	(다)
①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융합
②	문화 동화	문화 융합	문화 공존
③	문화 공존	문화 융합	문화 동화
④	문화 융합	문화 동화	문화 공존
⑤	문화 융합	문화 공존	문화 동화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에 제시된 '각각의 문화 유지 여부'와 '제3의 문화 요소 출현 여부'를 함께 읽어 문화 동화·문화 공존·문화 융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각각의 문화가 본래 특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2. 서로 다른 문화의 결합으로 제3의 문화 요소가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3. 두 조건의 조합을 문화 접변 유형과 연결한다.

핵심 근거

(가)는 각각의 문화가 유지되지 않고 제3의 문화 요소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는 문화 동화이다.
(나)는 각각의 문화가 유지되고 제3의 문화 요소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서로 다른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는 문화 공존이다.
(다)는 각각의 문화가 유지되면서 제3의 문화 요소가 나타나므로 기존 문화 요소들이 결합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문화 융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표의 (가) 문화 동화, (나) 문화 공존, (다) 문화 융합과 모두 일치한다.
② X — (가)는 문화 동화로 맞지만, (나)와 (다)를 서로 바꾸어 연결했다. 올바르게는 (나)는 문화 공존, (다)는 문화 융합이다.
③ X — 세 유형을 모두 잘못 연결했다. 올바르게는 (가)는 문화 동화, (나)는 문화 공존, (다)는 문화 융합이다.
④ X — 세 유형을 모두 잘못 연결했다. 올바르게는 (가)는 문화 동화, (나)는 문화 공존, (다)는 문화 융합이다.
⑤ X — (가)를 문화 융합, (다)를 문화 동화로 잘못 연결했다. 올바르게는 (가)는 문화 동화, (나)는 문화 공존, (다)는 문화 융합이다.

오답 포인트

문화 공존과 문화 융합은 모두 각각의 문화가 유지된다는 점이 같아 혼동하기 쉽다. 둘의 결정적 차이는 제3의 문화 요소의 출현 여부이다. 제3의 문화 요소가 없으면 공존이고, 있으면 융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각각의 문화가 유지되지 않으면 동화로 판단한다. 각각의 문화가 유지되면 제3의 문화 요소를 확인하여, 없으면 공존이고 있으면 융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원문화 소멸은 동화, 원문화 유지·새 요소 없음은 공존, 원문화 유지·새 요소 출현은 융합이다.

NoteBase

5. 다음 자료는 갑국의 계층 이동과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계층	비율(%)	
	1980년	2010년
A	30	50
B	60	30
C	10	20

갑국의 변화 요약:

- 하층 인구 감소
- 중층 인구 대비 상층 인구의 비 증가
- 전체 인구는 불변

<보 기>

ㄱ. 계층 서열은 A가 가장 높다.
ㄴ. 상층 인구가 하층 인구보다 많아졌다.
ㄷ.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하였다.
ㄹ. 중층 인구 증가 수는 상층 인구 증가 수의 2배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계층별 비율 변화와 전체 인구 불변 조건을 함께 이용해 A~C가 상층·중층·하층 중 무엇인지 판별하고, 인구 구조의 변화를 해석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전체 인구가 불변이므로 각 계층의 비율 변화는 인구수의 변화와 같은 방향임을 확인한다.
2. 하층 인구가 감소했으므로 비율이 60%에서 30%로 감소한 B를 하층으로 정한다.
3. 남은 A와 C를 상층·중층에 대입하여 '중층 인구 대비 상층 인구의 비'가 증가하는 경우를 찾는다. C/A는 1980년 10/30에서 2010년 20/50으로 증가하므로 C가 상층, A가 중층이다.

핵심 근거

계층은 C=상층, A=중층, B=하층이다. 1980년에는 하층 60%, 중층 30%, 상층 10%로 피라미드형이고, 2010년에는 중층 50%가 가장 두꺼운 다이아몬드형이다. 전체 인구가 같으므로 중층은 20%p, 상층은 10%p 증가하여 중층 인구 증가 수가 상층 인구 증가 수의 2배이다. 따라서 ㄷ과 ㄹ이 옳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의 조합이다. A는 상층이 아니라 중층이므로 ㄱ이 틀리고, 2010년 상층 C는 20%, 하층 B는 30%이므로 상층 인구가 하층 인구보다 많지 않아 ㄴ도 틀리다. 올바르게는 '계층 서열은 C가 가장 높고, 2010년에도 하층 인구가 상층 인구보다 많다'이다.
② X — ㄱ과 ㄷ의 조합이다. ㄷ은 옳지만, A는 중층이므로 'A가 가장 높다'는 ㄱ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계층 서열은 C가 가장 높다'이다.
③ X — ㄴ과 ㄷ의 조합이다. ㄷ은 옳지만, 2010년 상층 C의 비율 20%는 하층 B의 비율 30%보다 작으므로 ㄴ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2010년에도 하층 인구가 상층 인구보다 많다'이다.
④ X — ㄴ과 ㄹ의 조합이다.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중층 인구 증가 수는 상층 인구 증가 수의 2배이지만, 2010년에도 하층 인구가 상층 인구보다 많다'이다.
⑤ O — ㄷ과 ㄹ의 조합이다. 1980년의 하층 중심 피라미드형이 2010년의 중층 중심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했고, 중층의 증가 폭 20%p는 상층의 증가 폭 10%p의 2배이므로 두 보기 모두 옳다.

오답 포인트

A의 비율이 2010년에 가장 크다는 사실을 'A가 상층이다'로 오해하기 쉽다. 계층 서열은 비율의 크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변화 조건으로 판별한다. 또한 ㄹ은 전체 인구가 불변이므로 비율의 증가 폭 20%p와 10%p를 그대로 인구 증가 수의 비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감소 조건으로 한 계층을 확정한 뒤, 남은 계층의 비율을 조건에 직접 대입한다. 총인구가 같을 때에는 비율의 증감 폭이 인구수의 증감 비율을 그대로 나타내지만, 총인구가 달라지면 각 연도의 총인구를 곱해 실제 인구수를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비율의 크기는 계층의 높이가 아니다. 계층은 변화 조건으로 찾고, 총인구 불변이면 %p 변화로 인구 증감 수를 비교한다.

NoteBase

6. 정치과정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치권력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이 행사하는 힘이다.

② 현대 민주국가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적용하는 행정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로 국가기관을 나눔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있다.

③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기관이 국민의 뜻인 법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법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정치적 쟁점이 국민 전체의 이익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호혜성의 원칙이라 한다.

⑤ 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공동체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정치문화가 신민형 정치문화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정치권력, 권력 분립, 법치주의, 정치적 쟁점 해결 원칙, 정치문화 유형의 뜻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치권력은 국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사하는 강제력이다.
권력 분립은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서로 다른 국가기관에 맡겨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원리이다.
법치주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뜻이 반영된 법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공익성의 원칙은 정치적 쟁점을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시민형 정치문화는 향리형·신민형·참여형의 요소가 균형 있게 결합된 정치문화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정당이 행사하는 힘'이다. 정치권력은 국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사하는 힘이다.

② X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기능을 잘못 연결하였다. 올바르게는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며, 사법부가 법을 해석·적용하여 재판한다.

③ O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기관이 국민의 뜻이 반영된 법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호혜성의 원칙'이다. 정치적 쟁점을 국민 전체의 이익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공익성의 원칙이다.

⑤ X
틀린 표현은 '시민형 정치문화'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좁은 공동체 밖의 정치에 관심이 없는 모습은 향리형 정치문화에 해당한다. 시민형 정치문화는 향리형·신민형·참여형의 요소가 균형 있게 결합된 형태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정치권력의 행사 주체를 정당으로 바꾼 함정이고, ②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뒤바꾼 함정이다. ④는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보고 공익성의 원칙을 찾아야 하며, ⑤는 좁은 지역 공동체에만 관심을 두는 향리형 정치문화를 시민형 정치문화와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치 개념 문항은 주체와 핵심 기능을 짝지어 판단한다. 정치권력의 주체는 국가, 입법은 법의 제정, 행정은 법의 집행, 사법은 재판, 국민 전체의 이익은 공익성, 좁은 지역에만 한정된 관심은 향리형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국가의 힘은 정치권력, 법에 따른 권력 행사는 법치주의, 국민 전체의 이익은 공익성, 좁은 지역에만 머무는 관심은 향리형이다.

NoteBase

7. 정치의 의미에 대한 갑과 을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정치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는 활동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을: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활동도 정치입니다.

① 을은 갑과 달리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만 정치라고 본다.
② 갑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표를 선출하는 활동도 정치라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정치권력을 통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정치 현상으로 본다.
④ 을은 갑에 비해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⑤ 갑은 국가 현상설, 을은 집단 현상설에 해당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치를 정치권력과 국가의 활동으로 보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모든 사회집단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활동으로 보는 넓은 의미의 정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갑의 좁은 의미의 정치: 국가 수준에서 정치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는 활동이다. 국가 현상설에 해당하며 국가, 권력, 통치를 핵심어로 한다.
을의 넓은 의미의 정치: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모든 사회적 활동이다. 집단 현상설에 해당하며 갈등 해결, 이해관계 조정, 사회집단을 핵심어로 한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형성 이전이나 국가 밖 집단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뿐 아니라 시민단체·학교·회사 등 여러 사회집단의 의사 결정도 정치로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만 정치'라는 설명은 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은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활동을 폭넓게 정치로 본다. 올바르게는 을이 정치 주체와 정치 현상의 범위를 갑보다 넓게 본다고 해야 한다.
② X —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표를 선출하는 활동은 국가의 정치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갑의 관점으로는 정치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이러한 사회집단 내부의 의사 결정도 정치로 보는 것은 을의 관점이다.
③ X — '갑은 을과 달리'라는 부분이 틀렸다. 정치권력을 통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은 갑뿐 아니라 사회의 갈등 해결과 이해관계 조정을 포괄하는 을의 관점에서도 정치 현상이다. 올바르게는 정치권력과 직접 관련된 현상은 갑과 을 모두 정치로 본다고 해야 한다.
④ X —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을이 아니라 갑이다. 올바르게는 을이 국가가 생기기 전 집단의 갈등 조정까지 정치로 볼 수 있으므로 갑보다 설명 범위가 넓다고 해야 한다.
⑤ O — 갑은 정치를 국가와 정치권력의 활동으로 한정하는 국가 현상설이고, 을은 여러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과 이해관계 조정을 정치로 보는 집단 현상설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갑만 정치권력을 통한 갈등 해결을 정치로 본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범위를 포함하면서 사회집단의 활동까지 확장한 개념이다. 또한 ④는 국가 형성 이전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관점을 갑과 을 사이에서 뒤바꾼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정치권력·통치가 중심이면 좁은 의미의 정치로, 국가 밖 사회집단에서도 나타나는 갈등 해결·이해관계 조정·의사 결정이 중심이면 넓은 의미의 정치로 판단한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 현상도 포함한다.

암기 포인트

좁은 정치는 국가와 권력, 넓은 정치는 모든 집단의 갈등 조정이다. 갑은 국가 현상설, 을은 집단 현상설이다.

NoteBase

8.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 하였다. 다음의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	A	B
(가)	아니오	예

① A는 '예', B는 '아니오'이다.
② (가)에는 '의회 의원은 각료 겸직이 가능한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③ 개정 전,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었다.
④ 개정 후,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게 되었다.
⑤ 개정 후,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 되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정 전의 대통령제와 개정 후의 의원 내각제를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통령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 되는 정부 형태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립한다. 따라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의원의 각료 겸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원 내각제: 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이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다. 따라서 내각의 법률안 제출, 의원의 각료 겸직, 의회의 내각 불신임이 가능하다.
표에서 개정 전은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으므로 대통령제이고, 개정 후는 그 거부권이 없으므로 의원 내각제이다. 이에 따라 A는 '아니요', B는 '예'이며, (가)는 개정 전 '아니요' · 개정 후 '예'가 되는 특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인정된다. 틀린 표현은 ‘A는 예, B는 아니요’이며, 올바르게는 ‘A는 아니요, B는 예’이다.
② O — 의원 내각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어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지만, 엄격한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겸직할 수 없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③ X — 개정 전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독립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틀린 표현은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었다’이며, 올바르게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었다’이다.
④ X — 개정 후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므로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불신임할 수 없게 되었다’이며, 올바르게는 ‘불신임할 수 있게 되었다’이다.
⑤ X — 개정 후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원칙적으로 분리된다. 틀린 표현은 ‘동일인이 되었다’이며, 올바르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담당하게 되었다’이다.

오답 포인트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과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혼동하기 쉽다. 대통령제는 거부권은 있지만 법률안 제출권은 일반적으로 없고, 의원 내각제는 법률안 제출권은 있지만 행정부 수반의 거부권은 일반적으로 없다. 또한 의원 내각제의 의회 우위적 성격을 대통령제의 개정 전 상황에 잘못 적용하면 ③을 고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거부권이 있고 법률안 제출권·의원의 각료 겸직·내각 불신임이 없으면 대통령제로 판단한다. 거부권이 없고 법률안 제출권·의원의 각료 겸직·내각 불신임이 있으면 의원 내각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과 거부권,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과 법률안 제출·각료 겸직·내각 불신임이다.

NoteBase

9.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약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를 생물종의 다양성 보존과 인간 생활에 중요한 생태계로 인지하여 그 보존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맺었다. 1971년에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세계에서 101번째로 가입하였다.

① 람사르 협약
② 교토 의정서
③ 파리 협약
④ 몬트리올 의정서
⑤ 바젤 협약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채택 연도, 보호 대상, 협약의 목적을 근거로 국제 환경 협약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목적으로 1971년에 채택된 협약을 찾는 것이다.

용어 풀이

현명한 이용은 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인간이 지속 가능하게 이용한다는 뜻이다.

핵심 구분

람사르 협약은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제시문의 '습지', '생물종의 다양성 보존', '현명한 이용', '1971년 채택'이 모두 람사르 협약을 가리킨다. 반면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약은 기후변화,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바젤 협약은 유해폐기물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람사르 협약은 1971년에 채택되었으며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시문의 모든 핵심 단서와 일치한다.
② X —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다루는 기후변화 협약 체제의 의정서이므로 습지 보전 협약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교토 의정서'이며, 올바른 표현은 '람사르 협약'이다.
③ X — 파리 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이므로 1971년에 채택된 습지 보전 협약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파리 협약'이며, 올바른 표현은 '람사르 협약'이다.
④ X —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므로 습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몬트리올 의정서'이며, 올바른 표현은 '람사르 협약'이다.
⑤ X — 바젤 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를 통제하기 위한 협약이므로 습지 보전 협약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바젤 협약'이며, 올바른 표현은 '람사르 협약'이다.

오답 포인트

국제 환경 협약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기후변화·오존층·유해폐기물 관련 협약을 고르면 틀린다. 이 문항의 결정적 표현은 '습지'와 '현명한 이용'이며, 둘을 람사르 협약과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협약 문제에서는 먼저 보호 대상을 찾는다. 습지는 람사르, 온실가스 감축은 교토, 기후변화 공동 대응은 파리, 오존층 파괴 물질은 몬트리올,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바젤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람사르 =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다.

NoteBase

10. 다음에 제시된 헌법 조항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 제34조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① 적극적 권리이다.
②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③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권리이다.
④ 교육을 받을 권리도 이 기본권에 해당한다.
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각국 헌법에 널리 규정되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와 제34조 제2항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회권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사회권이 국가의 적극적 작용을 요구하는 열거적 권리라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와 정책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핵심 구분

현행 헌법 제32조 제1항은 근로의 권리와 국가의 고용 증진·적정 임금 보장 노력 의무를,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한다. 두 조항은 모두 사회권의 근거이다. 사회권은 근로권·교육권·사회보장권 등 구체적인 권리가 헌법에 개별적으로 열거된 권리이다. 국가의 간섭을 막는 데 중심이 있는 자유권과 달리,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사회권은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급부와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② X
사회권은 근로권·교육권·사회보장권 등 구체적인 내용이 헌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열거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틀린 표현: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올바른 표현: '열거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③ O
사회권은 국가가 급부와 제도를 마련해야 실현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④ O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 교육 여건 조성을 요구하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⑤ O
사회권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근대 헌법에 등장하였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각국 헌법에 널리 규정되었다.

오답 포인트

②의 '포괄적'이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사회권은 국가의 적극적 작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폭넓은 생활 영역과 관련되지만, 헌법상 권리의 규정 방식은 근로권·교육권·사회보장권 등 구체적인 권리를 나열한 열거적 권리로 정리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가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인지, 국가에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인지 먼저 구분한다.
급부·보장·증진·복지·교육·근로가 핵심이면 사회권으로 보고, 적극적 권리·국가 전제·열거적 권리라는 성격을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권은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국가 전제의 열거적 권리이다.

NoteBase

11. 다음 중 헌법 조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임용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③ 대한민국은 민족 우선의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④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1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지위,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통일정책, 국회의 예산 증액 권한,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헌법 조문의 주체·상대방·요건·인원수를 바꾸어 놓은 표현을 찾는 것이다.

용어 풀이

기본적 인권 =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비목 = 예산에서 지출의 목적과 내용을 구분하여 표시한 항목이다.

핵심 구분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헌법 제10조는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통일정책은 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이어야 한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부분은 맞지만, 책임의 상대방을 임용권자로 바꾼 부분이 틀렸다.
- 틀린 표현: '임용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올바른 표현: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O
- 헌법 제10조는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③ X
- 헌법은 '민족 우선'을 통일정책의 기준으로 정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민족 우선의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 올바른 표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④ X
- 국회가 정부 제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 틀린 표현: '정부의 동의 없이 … 지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⑤ X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는 13인이 아니라 9인이다.
- 틀린 표현: '1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올바른 표현: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맞는 표현 뒤에 책임의 상대방을 바꾸었고, ④는 '정부의 동의 없이'라는 말로 헌법의 금지 규정을 허용 규정처럼 뒤집었다. 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를 9인에서 13인으로 바꾼 숫자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헌법 조문 문제에서는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고 주체, 상대방, 원칙, 동의 요건, 숫자를 차례로 대조한다. 특히 '할 수 있다·할 수 없다'와 '국민·임용권자', '9인·13인'처럼 결론을 바꾸는 표현을 먼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공무원은 국민에게 책임,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 헌법재판관은 9인이다.

NoteBase

12.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 12인 이상의 발의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출된 법률안은 우선 본회의 의결 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2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④ 법률안의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법률안의 발의, 위원회 심사, 공포, 재의결 및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각 단계의 순서와 인원·기간 요건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재의요구 =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돌려보내 다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재의결 = 재의요구를 받은 법률안을 국회가 가중된 의결정족수로 다시 의결하는 것이다.

핵심 구분

국회의원은 국회법상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17

선지별 해설

① X
국회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 필요한 법정 최소 찬성 인원을 12인으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국회의원 12인 이상의 발의
올바른 표현: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X
의안은 본회의에서 먼저 의결된 뒤 상임위원회로 가는 것이 아니다. 본회의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린 표현: 우선 본회의 의결 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올바른 표현: 본회의에 보고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③ X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기간은 정부 이송 후 2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이다.
틀린 표현: 2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올바른 표현: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④ O
헌법상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받은 법률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⑤ X
법률의 시행일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공포 후 10일이 아니라 20일이 지난 때이다.
틀린 표현: 공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올바른 표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공포 기한 15일과 ⑤의 원칙적 효력 발생 시기 20일을 뒤바꾸기 쉽다. 또한 ④의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률 제정 절차 문제에서는 발의 인원, 심사 순서, 공포 기한, 재의결 정족수, 효력 발생 시기를 각각 분리해 확인한다. 숫자는 발의 10인, 공포 15일, 시행 20일의 묶음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발의 10인, 공포 15일, 시행 20일, 재의결은 재적 과반 출석·출석 3분의 2 찬성이다.

NoteBase

13.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의 선거 제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구 분	지역구 선거구제	지역구 선출방식
갑국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 선출	A
을국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 선출	B

<보 기>

ㄱ. A에는 다수 대표제, B에는 소수 대표제가 적절하다.
ㄴ. 을국에 비해 갑국에서는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ㄷ. 갑국에 비해 을국에서는 다수당이 유리하다.
ㄹ. 갑국에 비해 을국에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의 수를 기준으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대표 방식 및 정치적 효과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갑국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므로 소선거구제임을 확인한다.
2. 을국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므로 중·대선거구제임을 확인한다.
3. 소선거구제는 다수 대표제·사표 증가·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 심화와, 중·대선거구제는 소수 대표 가능성·사표 감소·소수 정당의 진출 용이와 연결한다.

핵심 근거

갑국처럼 한 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하면 최다 득표자만 당선되므로 다수 대표제가 적합하고 낙선 후보에게 투표한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을국처럼 2명 이상을 선출하면 소수 세력도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소수 대표제가 적합하다. 따라서 ㄱ과 ㄴ이 옳고, ㄷ과 ㄹ은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ㄴ의 조합이다. 갑국에는 다수 대표제, 을국에는 소수 대표제가 적합하고, 갑국은 한 명만 당선되므로 을국보다 사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② X — ㄱ은 옳지만 ㄷ이 틀리다. '을국에서는 다수당이 유리하다'가 잘못된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을국의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소수 정당도 의석을 얻기 쉬워 소수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옳은 조합은 ㄱ, ㄴ이다.
③ X — ㄴ은 옳지만 ㄷ이 틀리다. 을국은 여러 명을 선출하므로 다수당보다 소수당의 의회 진출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을국에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다'가 잘못된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한 명만 선출하는 갑국에서 불일치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옳은 조합은 ㄱ, ㄴ이다.
⑤ X — ㄷ과 ㄹ이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을국은 소수당의 의석 획득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는 을국보다 갑국에서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옳은 조합은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면 큰 정당이 의석을 더 많이 얻으니 다수당에 유리하다'고 단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비교의 핵심은 소수 정당도 당선자를 낼 기회가 생긴다는 점이다. 또한 사표와 득표율·의석률의 불일치는 한 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거구당 당선자 수를 먼저 확인한다. 1명이면 소선거구제이므로 다수 대표, 사표 증가, 거대 정당 유리,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 심화로 연결한다. 2명 이상이면 중·대선거구제이므로 소수 대표 가능, 사표 감소, 소수 정당 진출 용이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한 명 선출은 다수당·사표·의석 왜곡, 여러 명 선출은 소수당·사표 감소로 연결된다.

NoteBase

14. 근로자의 권리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

(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 조건에 대해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다)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쟁의 행위 등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보 기>

ㄱ. (가)는 사용자에게도 인정된다.

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자는 (나)의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ㄷ. 정당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다)를 행사함에 있어 폭력 행위가 금지된다.

ㄹ. 사용자가 (가)~(다)를 침해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근로자의 노동 3권과 그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주체와 행사 한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 주체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단결권 =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이다.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 조건에 관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할 권리이다.
단체행동권 =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쟁의 행위 등 집단행동을 할 권리이다.

핵심 구분

(가)는 단결권, (나)는 단체교섭권, (다)는 단체행동권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 3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쟁의행위 중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ㄴ과 ㄷ만 옳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17

선지별 해설

① X
- ㄱ, ㄴ 가운데 ㄱ이 틀리다. 헌법상 단결권은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노동 기본권이므로 사용자에게도 노동 3권으로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틀린 표현: ㄱ, ㄴ
- 올바른 표현: ㄴ, ㄷ

② X
- ㄱ, ㄷ 가운데 ㄱ이 틀리다. ㄷ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옳다.
- 틀린 표현: ㄱ, ㄷ
- 올바른 표현: ㄴ, ㄷ

③ O
- ㄴ과 ㄷ이 모두 옳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고, 쟁의행위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금지된다.

④ X
- ㄴ, ㄹ 가운데 ㄹ이 틀리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틀린 표현: ㄴ, ㄹ
- 올바른 표현: ㄴ, ㄷ

⑤ X
- ㄷ, ㄹ 가운데 ㄹ이 틀리다. ㄷ은 옳지만 구제 신청 주체를 개별 근로자로만 제한한 ㄹ은 옳지 않다.
- 틀린 표현: ㄷ, ㄹ
- 올바른 표현: ㄴ, ㄷ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사용자가 사용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과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혼동하기 쉽다. ㄷ에서는 적법한 쟁의행위라면 모든 수단이 허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금지된다. ㄹ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주체가 근로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도 포함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 3권 문제에서는 먼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대응시킨 뒤, 주체는 근로자, 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쟁의행위는 폭력·파괴 금지, 구제 신청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노동 3권의 주체는 근로자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와 폭력적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NoteBase

15. 다음 표는 재화와 서비스를 두 가지 성질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 분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가)	(나)
비배제성	(다)	(라)

① (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가 생산한다.
② (나)의 경우,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③ (다)의 사례로 혼잡한 유료 고속도로가 있다.
④ (라)의 경우,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된다.
⑤ (다)와 (라)에 해당하는 재화에서는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재화와 서비스를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 자원, 공공재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서 나타나는 시장 실패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이고,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나 편익을 줄이는 성질이다.
(가)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사적 재화이다.
(나)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클럽재이다.
(다)는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공유 자원이다.
(라)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공공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는 사적 재화이므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민간이 생산·공급한다. 틀린 표현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생산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민간이 생산한다'이다.
② X — (나)는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클럽재이므로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유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이며, 올바르게는 '공유지의 비극은 배제성이 없고 경합성이 있는 (다)의 공유 자원에서 나타나기 쉽다'이다.
③ X — 혼잡한 유료 고속도로는 요금으로 이용자를 배제할 수 있고, 혼잡으로 이용자 사이의 경합성도 나타나므로 (가)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다)의 사례'이며, 올바르게는 '혼잡한 유료 고속도로는 (가)의 사례'이다.
④ X — (라)의 공공재는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다. 틀린 표현은 '많이 생산된다'이며, 올바르게는 '적게 생산된다'이다.
⑤ O — (다)와 (라)는 모두 배제성이 없으므로 대가를 내지 않고 편익을 얻으려는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에서는 '유료'가 배제성을, '혼잡한'이 경합성을 뜻한다. 유료 고속도로를 언제나 클럽재로 외우면 혼잡 여부를 놓치기 쉽다. 또한 ④의 공공재는 시장에서 과다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무임승차로 과소 생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이용자를 막을 수 있는지를 보아 배제성을 판단하고, 다음으로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지를 보아 경합성을 판단한다. 배제성이 없으면 무임승차 가능성을, 배제성이 없으면서 경합성이 있으면 공유지의 비극 가능성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사적 재화는 배제·경합, 클럽재는 배제·비경합, 공유 자원은 비배제·경합, 공공재는 비배제·비경합이다.

NoteBase

16. 다음 표는 시장 구조에 따른 시장별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 / 특성	A	B	C
시장 지배력	강함	상당	약간
경쟁 정도	◁◁◁◁ 약해짐		심해짐 ▶▶▶▶

① A 시장의 기업은 가격 수용자이다.
② C 시장에는 제품 차별화 현상이 발생한다.
③ A와 C 시장의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한다.
④ B 시장은 A 시장과 달리 자연 독점에 의해 형성된다.
⑤ C 시장은 B 시장에 비해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시장 지배력이 강하고 경쟁이 약한 쪽부터 독점 시장(A), 과점 시장(B), 독점적 경쟁 시장(C)을 구분하고, 각 시장의 가격 결정력·제품 차별화·진입 장벽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시장 지배력이 가장 강하고 경쟁이 가장 약한 A를 독점 시장으로 판단한다.
2. 시장 지배력과 경쟁 정도가 중간인 B를 과점 시장으로 판단한다.
3. 시장 지배력이 약하고 경쟁이 가장 심한 C를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판단한다.
4. 각 시장의 가격 결정력, 제품 차별화, 진입 장벽을 선지와 연결한다.

핵심 근거

독점 시장은 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가격 결정력이 크고 경쟁이 약하다. 과점 시장은 소수 기업이 경쟁하여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다수 기업이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하므로 경쟁이 심하지만, 제품 차별화 때문에 각 기업은 제한적인 가격 결정력을 가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A는 시장 지배력이 강하고 경쟁이 가장 약한 독점 시장이다. 독점 기업은 가격 수용자가 아니라 가격 결정자이다. 틀린 표현 '가격 수용자이다'는 '가격 결정력이 크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 C는 시장 지배력이 약하고 경쟁이 심한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다수 기업이 서로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하므로 제품 차별화 현상이 나타난다.
③ X — A는 독점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지만, C의 기업은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제한적인 시장 지배력만 가진다. 틀린 표현 'A와 C 시장의 기업'은 'A 시장의 기업'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B는 소수 기업이 경쟁하는 과점 시장이며, 자연 독점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 독점은 규모의 경제로 한 기업이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 A와 같은 독점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틀린 표현 'B 시장은 … 자연 독점에 의해 형성된다'는 'A 시장은 자연 독점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⑤ X — C는 다수 기업이 진입하여 경쟁하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므로 과점 시장인 B보다 진입 장벽이 낮다. 틀린 표현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진입 장벽이 낮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C의 경쟁이 심하다는 점만 보고 완전 경쟁 시장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표에는 C의 시장 지배력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고 '약간'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는 제품 차별화로 제한적인 가격 결정력을 갖는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장 지배력과 경쟁 정도를 반대 방향의 두 축으로 읽는다. 지배력이 강하고 경쟁이 약하면 독점, 둘 다 중간이면 과점, 지배력은 약하지만 제품 차별화로 조금 남아 있고 경쟁이 심하면 독점적 경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독점은 가격 결정력, 과점은 소수 기업, 독점적 경쟁은 다수 기업과 제품 차별화가 핵심이다.

NoteBase

17. 다음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달러의 수요와 공급 요인이 지속된다고 할 때, 그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최근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전문가들은 달러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공급 증가 요인이 더 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 기>

ㄱ.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ㄴ. 한국산 수출 상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ㄷ.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의 생산비가 증가할 것이다.
ㄹ.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의 경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달러의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하되 공급 증가 효과가 더 클 때 환율과 원화 가치가 어떻게 변하며, 그 변화가 수출입과 해외 경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달러 수요가 증가한다.
핵심 사실 2: 달러 공급도 증가하며, 공급 증가 효과가 수요 증가 효과보다 더 크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달러 공급 증가가 더 강하므로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원화 표시 가격인 환율은 하락한다.

핵심 개념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로 표시한 외국 통화의 가격이다. 달러 공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여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달러 가치는 하락한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같은 달러 금액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원화가 줄어든다.

적용 기준

원/달러 환율 하락을 각 경제 주체의 원화 또는 달러 부담에 적용한다. 원화로 정해진 한국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상승하고, 달러로 지급하는 미국산 부품 대금과 미국 유학 경비의 원화 환산액은 감소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 ㄴ 중 ㄱ이 틀렸다.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의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는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로 고쳐야 하며, 옳은 조합은 ㄴ, ㄹ이다.
② X — ㄱ과 ㄷ이 모두 틀렸다.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미국산 부품의 달러 가격이 일정하다면 이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가 줄어 한국 기업의 생산비는 감소한다. 따라서 '원화 가치 하락·생산비 증가'는 '원화 가치 상승·생산비 감소'로 고쳐야 하며, 옳은 조합은 ㄴ, ㄹ이다.
③ X — ㄴ은 맞지만 ㄷ이 틀렸다. 환율 하락으로 미국산 부품 대금의 원화 환산액이 줄어 생산비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따라서 ㄷ을 ㄹ로 바꾼 ㄴ, ㄹ이 옳은 조합이다.
④ O — ㄴ과 ㄹ이 모두 맞다. 환율이 하락하면 한국산 수출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상승하고, 미국에서 쓰는 달러 경비의 원화 환산액은 줄어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부담은 감소한다.
⑤ X — ㄹ은 맞지만 ㄷ이 틀렸다. 환율 하락은 미국산 부품 구입에 필요한 원화를 줄이므로 생산비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따라서 ㄷ을 ㄴ으로 바꾼 ㄴ, ㄹ이 옳은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달러 수요가 증가한다는 사실만 보고 환율 상승으로 판단하기 쉽다. 이 문제에서는 달러 공급 증가 효과가 더 강하다는 조건이 핵심이므로 최종적으로 환율 하락과 원화 가치 상승을 적용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환 수요와 공급이 함께 변하면 어느 쪽 변화가 더 강한지 먼저 확인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 상승으로 연결하고,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상승하며 달러로 지급하는 수입 대금과 해외 경비의 원화 부담은 감소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달러 공급 우세 → 환율 하락 → 원화 가치 상승 → 수입·해외 지출의 원화 부담 감소이다.

NoteBase

18. 다음 표는 재화 A~D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화	A	B	C	D
수요의 가격탄력성	탄력적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① A재는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다.
② B재는 가격이 상승할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③ C재는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다.
④ D재는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⑤ C재와 D재는 가격이 하락할 때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가격 변화와 수요량 변화의 크기, 판매 수입의 변화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A는 탄력적, B는 단위 탄력적, C는 비탄력적, D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판매 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인 $TR = P \times Q$이다.
가격이 변할 때 판매 수입은 수요량의 변동률과 가격의 변동률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달라진다.

사용할 공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E_d=≤ft|수요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이다.
$E_d > 1$이면 탄력적, $E_d = 1$이면 단위 탄력적, $0 < E_d < 1$이면 비탄력적, $E_d =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과 판매 수입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비탄력적 수요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단위 탄력적 수요에서는 판매 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A재는 탄력적이므로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 '작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이다.
② X — B재는 단위 탄력적이므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여 판매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이다.
③ X — C재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다는 뜻이지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라는 뜻이 아니다. '수평선이다'가 틀린 표현이며,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인 수요 곡선에 해당한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은 수직선이다.
④ X — D재는 완전 비탄력적이어서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공급이 증가하면 고정된 수요량에서 균형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이다.
⑤ O — C재는 비탄력적이므로 가격 하락률보다 수요량 증가율이 작아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D재는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량이 전혀 늘지 않아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비탄력적'을 '완전 비탄력적' 또는 수평선과 혼동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④는 완전 비탄력적일 때 변하지 않는 것이 가격이 아니라 수요량이라는 점을 바꾸어 놓았다. 또한 단위 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이 변해도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탄력성의 크기로 수요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을 비교한 뒤, $TR = P \times Q$에 따라 판매 수입의 방향을 판단한다. 탄력적이면 가격과 판매 수입은 반대 방향, 비탄력적이면 같은 방향, 단위 탄력적이면 판매 수입은 일정하다.

암기 포인트

탄력적: 가격과 수입은 반대, 비탄력적: 가격과 수입은 같은 방향, 단위 탄력적: 수입은 일정하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아니라 수요량이 고정된다.

NoteBase

19. 다음 표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변동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공급 \ 수요	증가	감소
증가	(가)	(나)
감소	(다)	(라)

<보 기>

ㄱ. (가)의 경우, 균형가격의 변화가 불확실하고 균형거래량이 증가한다.

ㄴ. (나)의 경우, 균형가격이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의 변화가 불확실하다.

ㄷ. (다)의 경우, 균형가격이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의 변화가 불확실하다.

ㄹ. (라)의 경우, 균형가격이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이 감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각 변동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미치는 방향을 따로 판단한 뒤, 두 효과의 방향이 같으면 확정하고 반대이면 변화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수요 증가·감소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미치는 방향을 확인한다.
2. 공급 증가·감소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미치는 방향을 확인한다.
3. 가격과 거래량을 각각 비교하여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면 변화 방향을 확정하고, 반대 방향이면 상대적 변동폭을 알 수 없으므로 불확실하다고 판단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수요 증가는 가격과 거래량을 모두 증가시키고, 수요 감소는 가격과 거래량을 모두 감소시킨다. 공급 증가는 가격을 하락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며, 공급 감소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거래량을 감소시킨다.
(가)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함께 일어나므로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불확실하다.
(나)는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함께 일어나므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불확실하다.
(다)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함께 일어나므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불확실하다.
(라)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함께 일어나므로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불확실하다.
따라서 ㄱ과 ㄴ만 옳다.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ㄴ의 조합이다. (가)는 두 변동이 모두 거래량을 늘리지만 가격에는 반대 효과를 주므로 가격 변화는 불확실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나)는 두 변동이 모두 가격을 낮추지만 거래량에는 반대 효과를 주므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 변화는 불확실하다.
② X — ㄷ이 틀렸다. (다)에서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모두 가격을 상승시키므로 '균형가격이 하락한다'가 아니라 '균형가격이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의 변화가 불확실하다'가 옳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③ X — ㄷ이 틀렸다. (다)의 균형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한다. ㄴ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으므로,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④ X — ㄹ이 틀렸다. (라)에서는 수요 감소가 가격을 낮추고 공급 감소가 가격을 높이므로 균형가격의 변화는 불확실하다. 거래량은 두 변동 때문에 모두 감소한다. 따라서 '균형가격이 상승한다'가 아니라 '균형가격의 변화가 불확실하고 균형거래량이 감소한다'가 옳으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⑤ X — ㄷ과 ㄹ이 모두 틀렸다. (다)는 균형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 변화가 불확실하며, (라)는 균형가격 변화가 불확실하고 거래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동시에 변한 수요와 공급 중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틀리기 쉽다. 특히 ㄷ은 공급 감소만 보더라도 가격 상승 방향인데 '가격 하락'으로 제시했고, ㄹ은 거래량 감소는 맞지만 가격은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의 효과가 충돌하므로 상승으로 확정할 수 없다. 한 문장의 일부만 맞아도 전체 진술은 틀리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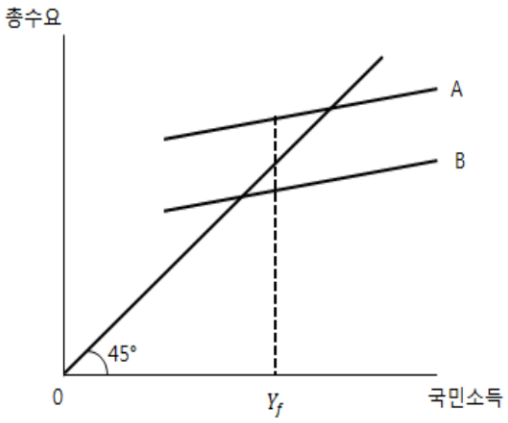
수요 변동과 공급 변동의 효과를 가격과 거래량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면 그 방향으로 확정하고, 서로 반대이면 어느 쪽의 변동 폭이 더 큰지 주어지지 않은 한 불확실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요는 가격과 거래량을 같은 방향으로, 공급은 가격과 거래량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두 이동의 효과가 같으면 확정, 충돌하면 불확실이다.

NoteBase

20. 다음 그림은 총수요곡선 A, B와 총공급곡선(45°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_f는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을 의미한다.)



① 총수요곡선이 A일 때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감세 등 재정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② 총수요곡선이 B일 때 공급이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③ 총수요곡선이 B일 때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여 실업이 존재한다.

④ 총수요곡선이 A일 때 실질국민소득은 장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지만, 명목국민소득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⑤ 총수요곡선이 B일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여 정책을 실시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수요곡선과 45°선의 교점인 균형국민소득을 완전고용국민소득 Y_f와 비교하여 인플레이션 갭과 디플레이션 갭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45°선에서는 총수요와 국민소득이 같다.
2. 총수요곡선과 45°선의 교점에서 균형국민소득을 찾는다.
3. 그 교점이 Y_f의 오른쪽이면 인플레이션 갭, 왼쪽이면 디플레이션 갭으로 판단한다.
4. 인플레이션 갭에는 긴축정책, 디플레이션 갭에는 확대정책을 연결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A와 45°선의 교점은 Y_f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A에서는 완전고용 수준을 초과하는 총수요, 즉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한다. B와 45°선의 교점은 Y_f의 왼쪽에 있으므로 B에서는 총수요 부족에 따른 디플레이션 갭과 실업이 발생한다. A의 초과수요는 장기적으로 물가를 올리고 실질국민소득을 완전고용 수준으로 되돌리므로, 실질국민소득은 장기적으로 늘지 않는 반면 명목국민소득은 물가 상승에 따라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A의 교점은 Y_f의 오른쪽이므로 이미 총수요가 과다한 상태이다. '감세'는 총수요를 더 늘리므로 잘못이다. 올바르게는 증세나 정부지출 축소와 같은 긴축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줄여야 한다.
② X — B에서는 총공급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총수요가 부족하여 균형국민소득이 Y_f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갭과 경기 침체 압력이 발생한다.
③ X — B의 교점은 Y_f의 왼쪽이므로 '인플레이션 갭'이라는 표현이 잘못이다. 올바르게는 디플레이션 갭이 발생하며, 이때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
④ O — A에서는 단기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 수준을 초과하지만 장기에는 물가 조정으로 실질국민소득이 Y_f로 돌아간다. 물가가 상승하므로 실질국민소득은 장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지만 명목국민소득은 증가한다.
⑤ X — B는 총수요 부족 상태이므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표현이 잘못이다. 올바르게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확대 통화정책으로 총수요를 늘려야 한다.

오답 포인트

세로선 Y_f에서 총수요곡선의 높이만 보고 균형을 판단하면 혼동하기 쉽다. 균형은 반드시 각 총수요곡선과 45°선의 교점에서 찾는다. 또한 인플레이션 갭에는 긴축정책, 디플레이션 갭에는 확대정책이 대응된다는 방향을 뒤집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총수요곡선과 45°선의 교점을 먼저 찾고 이를 Y_f와 비교한다. 교점이 오른쪽이면 초과수요·인플레이션 갭·긴축정책, 왼쪽이면 수요 부족·디플레이션 갭·실업·확대정책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45°선 교점이 Y_f보다 오른쪽이면 인플레이션 갭과 긴축, 왼쪽이면 디플레이션 갭과 확대이다.

NoteBase